

TIER 1 | USCIRF-RECOMMENDED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조직된 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적이며 초당적인 위원회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적인 표준을 기준으로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의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미 대통령, 국무장관, 의회에 정책권고를 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2018년 연례 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연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중요한 사건 중에는 이 기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것도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전화 202-523-3240으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북한

개요: 북한 정부는 종교와 신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허가를 받은 소수의 국영 예배당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마치 북한에 종교 생활이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상 북한 정권은 종교, 특히 기독교 등 서방과 관련된 신앙을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을 체포, 고문, 투옥하고 심지어 처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탈북자 증언과 권익단체 및 비정부기관의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탄압 실태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성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북한 정권은 오랜 기간 자행해왔던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철저한 탄압 행위를 2017년에도 계속하였으며,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판단하였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2월에 지정하였다.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한다.

- 1974년 무역법 402 조 및 409 조(잭슨-배닉 개정조항)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인권침해, 특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가담했거나 책임이 있는 특정 정부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해 표적화된 수단을 사용한다.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관리하는 “특별지정국민(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목록, 국제종교자유법 제 604(a)조 및 국제매그니츠키인권책임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에 따른 비자거부, 국제매그니츠키법안에 따른 자산동결, 기타 행정부 및 의회의 조치 또는 UN 조치 등이 그 예이다.
-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협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해외의 개인이나 기업들을 파악하고 제재나 기타 수단을 통해 압박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에 관한 UN 위원회 2014년 조사보고서\(COI\)](#) 결과 중 종교나 신념의 자유 탄압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후속 UN 조사를 요청하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유사하고 그와 연계된 실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를 국무부 내 정식 직책으로 유지하고 종교의 자유가 해당 직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한다.
-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담당 특별대사(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북한과의 협상이나 북한에 관한 공식/비공식 회담에 모두 참석시켜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논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타당한 경우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비핵화 및 안보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포함시킨다.
-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역내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 등 인권 및 인도주의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양심수 석방 및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수감 시설 폐쇄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 북한 내 그리고 국경 지역에 송신되는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휴대전화, USB 메모리, DVD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 확산, 인터넷 접속 개선 등을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하여 가장 악명 높은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지를 독려하고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 즉,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하고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Refugee Convention and Protocol) 및/또는 유엔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중단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17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R. 2061/S. 1118](#))을 공동 발의하고 재승인하며,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2014년 조사보고서의 최신 문구 및/또는 권고사항을 반영한다.

배경

북한

공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1 당제; 주체사상을 공식 국가 사상으로 함

인구: 25,248,000명 이상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신앙: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 단체(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 등) 운영

종교인구 분포*: (참고: 이전 수치로서 확인 어려움)

<1%: 기독교

기타 단체: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통, 현지 종교 운동인 천도교

* CIA 월드 팩트북(CIA World Factbook), 미 국무부, 한국 통일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추정치

북한의 현 지도자인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개인숭배와 유사한 주체사상을 만들어낸 할아버지로부터 개인숭배를 세습하여 공산주의와 비슷한 지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그에 따라 김정은 일가와 국가를

신격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종교가 되었다. 종교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가족들이 연좌죄의 적용을 받아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지 않도록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등 보통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한다. 북한 당국은 종교나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집단 처벌을 적용한다. 수감자들이 겪는 학대 이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변함 없이 심각하여, 영양실조 및 이동, 표현, 정보 접근의 자유 제한, 성폭행, 강제노동, 노예화, 강제실종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북한이 2017년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미사일 발사 및 수소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6차 지하 핵실험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유엔은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2월, 북한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3월에는 해당 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였다. 같은 달, 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서울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성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7년 5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가졌다. 2017년 12월에는 미국 및 8개 회원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당시 스웨덴, 영국, 우크라이나 대표들은 각국 발언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2017년, 태용호 전(前) 북한 외교관이 2016년 자신이 감행한 한국행 탈북에 대해 미 의회에서 증언하였으며, 미국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회는 대중들이 김정은을 신으로 묘사하고 신격화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총 881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 강화 및 북중 국경 경계 강화 등의 이유로 2017년에는 총 탈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종교의 자유 실태

기독교에 대한 정권의 통제 및 억압: 모든 종교단체는 정권이 통제하는 예배당 몇 곳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곳에서의 활동마저도 철저하게

통제되고 대부분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연출된다. (개신교 교회 세 곳, 천주교회 한 곳, 러시아 정교회가 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위치와 신도의 수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에 따르면, 종교를 전파하고,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며, 기도, 찬송 등의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일례로, 2017년 6월, 북한 당국은 김승모라는 주민이 중국 방문 중 기독교인 가족 및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후 그를 체포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에 여러 구금 시설이 있지만 북한 정권은 현재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 약 8-12만 명의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강제노동이나 처형을 당하는 수 만 명이 지하 교회나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를 서방, 특히 미국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파악하고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포한 사람은 종종 (해당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족까지 투옥한다. 2017년 5월, 기독교인 탈북자들 몇 명이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렸다. 한 탈북자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에는 김정은에 대한 숭배라는 단 하나의 종교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생각할 권리가 없고 특정한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받는” 환경에서 복음서는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줄과 같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전범위원회(War Crimes Committee)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도주의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수용소 내에서도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수감자들은 “그들의 종교 때문에” 또는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어서, 혹은 해외에서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기독교인(또는 기독교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수용소 내에서도 특정 구역에 투옥되어 한층 더 가혹한 탄압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1950년대에 정치범수용소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소위 “당과 국가의 적들”을 일소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북한 당국이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것이 이례적으로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이었다. 임 목사는 2015년 12월, 국가전복 활동 및 북한 지도부 모욕 혐의로 종신강제노동형을 선고 받았다. 북한 당국은 수감 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목사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하였다. 임 목사는 강제수용소 수감 2년 반 만에 스웨덴 대사관의 지원으로 방북한 캐나다 고위급 대표단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

중국 내 북한 난민: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적 또는 성적 착취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국경 지역에 대해 봉쇄를 강화하였고 난민 지원 단체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중국의 비호의적인 태도에 이러한 조치가 더해져 선교사들과 교류했거나 종교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2017년 탈북자들과 만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복송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보이거나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경우 송환 즉시 한층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소환하는 것은 1951년 유엔난민에관한협정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유엔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을 독려하는 등 대북 정책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어조와 제재는 유지하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사실상 이전 행정부들이 취했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2017년 4월 28일,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당시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시행에 관한 유엔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구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잔혹함과 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안보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요청하였다. 2017년 5월, 당시 틸러슨 장관을 대표로 한 미국은 북한에 관한 논의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무장관 회의를 주최하였다.

2017년 이루어진 다자간 노력과 더불어 미국은 인권 및 북한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2017년 8월, 국무부는 북한의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아, 영양실조, 강제노동, 고문의 증거를 보여주는 기본자료를 발행하였다. 2017년 9월 1일, 국무부는 1회성 특별비자를 획득한 사람의 방북을 제외한 미국 시민의 북한 입국 및 경유를 전면 금지하였다. 9월 말, 재무부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통해 북한 은행 8개 및 해외 거주 북한 은행 직원 26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2017년 10월, 국무부는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PL 114-122)에 따라 북한의 인권탄압 및 검열에 관한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권탄압 및 검열 책임자 명단에 관계자 7명과 국가기관 3곳을 추가해, 3개의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포함한 총 42명의 개인과 국가기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3개의 보고서 어디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무부는 이 세 보고서 모두를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을 “세계 최악”이라고 표현하였다.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을 언급하며 “기도를 하거나 종류를 막론하고 종교 서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된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현재 구금, 고문당하고 많은 경우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역시 11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중국인 사업가 한 명 및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무역회사들, 그리고 북한의 해운 무역회사와 선박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017년 12월, 미국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한 북한 정부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을 지속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들을 일상적으로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들을 볼모로 사용한다. 2017년, 북한 정권은 평양과학기술대 교수인 김학송과 김상덕(토니 김)을 체포하였다. 이 두 명의 미국 시민에 대해 북한 정권은 이들이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이들에 앞서 북한최고인민법원은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 귀화한 김동철에 대해 간첩 혐의로 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에 수감되어 있던 미국인 오토 웬비어(Otto Warmbier)는 2017년 6월,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한 후 사망했다. 오토 웬비어는 평양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정치 선전물을 떼어낸 후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조셉 윤(Joseph Y. Yun) 대북정책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는 오토 웬비어의 석방을 위해 북한과 수 차례 접촉하였으며 그의 송환을 맡은 의료팀과 동행하여 방북하였다. 오토 웬비어 사망 후 국무부 대변인은 조의를 표하는 한편, 나머지 미국 시민 세 명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조셉 윤 대사는 방북 당시 이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2017년 12월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특별관심대상국 지정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대신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중 제재를 가해왔고, 이번 경우에는 잭슨-배닉 개정조항에 따른 제재를 확대하였다. 잭슨-배닉 조항은 의회가 인권탄압에 대해 공산주의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후 북한 등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었다.